

‘환경 분쟁’ 조정하는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전남도-여수시 상임이사직 싸고 힘겨루기

입주업체들 “환경전문가 아닌 코드 인사” 불만

여수산단 환경협의회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여수산단 입주사들이 흥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31일 여수시와 여수산단 등에 따르면 여수산단 환경협의회(회장 강승구 GS칼텍스 전무)는 2일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2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제5대 상임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상임이사 선출은 4대 상임이사가 지난 7월 31일자로 2년의 임기를 마쳤으나 상임이사직을 놓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팽팽히 맞서 4개월이

지나서야 치르게 됐다.

현재 거론되는 상임이사 후보로는 송형남(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씨와 전남도의 임근기(전 학운부군수)씨 등 4명이다.

상임이사는 초대와 2대까지 환경부

직원이 맡아오다 지난 2005년부터 여수시 퇴직 국장들이 차지해 왔고, 전남도 출신들은 고문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전남도가 상임이사 자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그동안 여수시장의 코드인사로 내정된 상임이사 자리가 시·도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경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산단내 농작물 피해보상과 환경분쟁이기 때문에 여수시의 조정 역할 비중이 크다”며 “환경관리관도 이회와 사회단체에서 환원을 요구하는 바탕에 환경협의회 상임이사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상임이사 자리는 여수시와 전남도, 영산강 환경 관리청이 차례대로 맡는 것이 불문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그동안 환경부와 여수시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남도가 할 차례인데 여수시가 끼어드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환경협의회 예산(연간 7억~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여수산단 공장협의회는 환경협의회 기능이 유사단체와 중복돼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환경전문가가 아닌 코드인사로 상임이사가 선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나 전남대 환경기술센터 등에서 얼마든지 환경협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환경협의회를 지원해야 하냐”며 “양 기관이 싸우는 틈에 이리저리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지난 28~30일 사흘간 열린 ‘제10회 별교 괴막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날짜 타기 경주를 벌이고 있다. ‘첨정갯벌과 살아숨쉬는 문학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문학기행 등 테마축제로 치러졌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순천공고 공교육 정상화 선언

면학분위기 조성 나서



과 김기태 총동창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가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순천공고는 최근 전교생 1246명과 교직원 113명을 비롯해 고석주 학교운영위원장, 김기태 총동창회장, 자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문학교로 가는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 ▲교직을 준수한다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다짐문’을 낭독했다.

이어 고석주 학교운영위원장

여수 세계 박람회장 주변 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수 세계 박람회장 주변 해역 일부가 한시적으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해상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수신항 일원 일부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당분간 관계기관과 단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공고한 뒤 공고문 등을 제작, 설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이나 연안여객선 신규 취항 등 관광객 해상 수송을 위한 입출항 선박 증가에 따라 해상안전 확보 대책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 광양시·여수시·여수군

지역별로 광양시·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 해상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수신항 일원 일부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당분간 관계기관과 단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사실을 공고한 뒤 공고문 등을 제작, 설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양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市·상의·광양제철소 ‘동반성장 혁신 허브’ 협약

광양시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발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광양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

서 이성웅 광양시장, 김준식 광양제철소장, 김효수 광양 상공회의소장, 광양시 소재 5개 산단 협의회장,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광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 허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광양시에서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동반성장 혁신허브’는 대기업의

개의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 수료업체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약 맴도링 및 피드백을 지원해 자생력을 높인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민·관·기업의 연락체계 구축과 혁신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한 진행관리를 지원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동반성장 혁신허브 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생긴다

국비 지원 대상 사업 선정

500병상 규모 2014년 착공

군산시의 숙원사업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이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면서 “내년에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예비심의에서 탈락했으나 전북대가 다시 준비해 지

난 6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옥yan면 일대 13만㎡의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이 병원은 뇌신경, 심혈관 등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운영된다. 총 사업비 2200억원 가운데 전북대병원이 1000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600억원, 시비 24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3년 설계에 들어가 2014년 착공한 뒤 2018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건립되면 굳이 서울 등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소방서(소장 김화성)는 지난 28~29일 열린 ‘제2회 평생 학습 교육마당’ 행사장에 소방안전 체험장을 운영했다. 체험장에서는 물소화기 사용요령과 화재예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교육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대상 중앙연구소 미생물팀 순창 입주

대상 중앙연구소 미생물팀(센터장 이정미)이 (재)순창군 밭盔미생물관 리센터내에 입주했다. 이에 따라 순창지역 관·연·산 미생물 연구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상 중앙연구소는 지난 31일 최정호 실장과 장류식품사업소 권재봉 소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대상 중앙연구소 미생물팀은 향후 공장장류에 맞는 다양한 우수 밭盔미생물을 밭盔·육종해 차별화된 순창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

터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미 순창센터장은 “순창 전통장류에는 수백년간 이어져온 우수한 밭盔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순창의 장류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고했던 한노총 전북고속 노조의 운행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전북도가 지난 30일 전북고속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노총 전북고속 노조는 운행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운행거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 전북고속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0여시간의 마라톤상태 끝에

체불 갈등 빚은 전북고속 정상 운행

노사 협상 극적 타결에 시민들 안도

전북도의 보조금 미지급에 따라 임금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노총 전북고속 노조와 사측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31일 예고했던 한노총

전북고속 노조의 운행거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운행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터와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미 순창센터장은 “순창 전통장류에는 수백년간 이어져온 우수한 밭盔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순창의 장류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고했던 한노총

전북고속 노조의 운행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운행거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 전북고속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1

시부터 10여시간의 마라톤상태 끝에

사측이 체불임금 일부를 지불하는 조

건으로 운행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사측 관계자는 “9월 임금과 7월

임금 인상분을 31일 오후 1시까지

임금하고 3분기 상여금을 11월 25일

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조와 합의를 봤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서로 한 밭盔씩 물려났다”고 결고했다.

/연합뉴스

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체불됐던 임금 전체는 아니지만 사측이 연차수당을 제외한 체불임금 8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운행거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추가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운행거부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남원 포도전문생산단지 남원시 포도는 평야부와 고랭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월 이상 출하할 수 있는 포도 주산지로 평야부 65%, 고랭지 35%가 접유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성영(임실군)씨, 을부 1등은 박경규(정읍시)씨가 차지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선비문화의 고장” 정읍에서 열리는 시조경찰대회가 사라져가는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의 맥을 이어가는 대회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김제경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1일 2층 대강당에서 전 수사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화(手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제수

화 통역센터 김용태 선임통역사가 초청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기초적 수화 요령과 수사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